하루를 시작하며



이 종 실
수필가·시인·한우리 연구소 선생

감투의 무게

감투는 우리 선인들이 썼던 모자의 일종이다. 이것은 높은 벼슬이나 직위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고, 사전은 더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감투를 쓴 사람'이 속물로 보일 때가 있다. 지위를, 그룹과 커뮤니티를 위한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자신의 공명이나 권력 혹은 사익의 추구에 이용하는 자들이 이 무리에 든다. '감투'라는 지칭은 본인이 속한 집단과 그 구성원들에게도 반가운 게 아니다.

감투가 높은 자리를 비하하는 비유물이 된 연유가 궁금했다. 그 언저리를 살펴보았다. 과거 머리에 쓰던 것들로는 양반의 갓, 낮은 신분이나 평민의 초립, 사대부의 정자관, 부녀자의 족두리, 방한모인 남바위, 관복과 같이하는 사모 등이 있었다. 상투의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망건이 있었다. 벼슬아치가 집에서 단독으로 쓰거나 갓 아래 받쳐 쓰는 탕건도 있었다. 감투는 벼슬 없는 서민이나 벼슬아치가 집에서 편하게 쓰던 관모였다고 한다. 이것은 탕건과 비슷한데 턱이 없이 밋밋한 민머리 형태라는 점에서 그것과 달랐다. 감투는 벼슬의 유무와 무관했으나 탕건과 같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감투를, 자격이 없거나 모자란 자가 흉내질하는 벼슬에 빗대었는지 모르겠다.

달갑지 않은 이 '감투'는 꽤 여러 곳에서 보인다. 감투일 수 있는 자리는 기업과 행정관서 소속부터 자생단체와 비영리 단체, 공적 조직, 각종 위원회와 대의 기관에 이르기까지 그 수장이나 간부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부지기수이다. 감투는, 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보다 장본인의 욕심과 능동적인 공력에 의해 취득되는 게 훨씬 더 많다. 감투는 여러 사람에게 고루 나누어지기도 하고, 탐하는 자에게는 여러 개가 또 오래 주어지기도 한다. '감투를 썼다.' 역시 냉소적 표현이다. 이는 당사자가 그 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무리를 범하였거나, 현직에서 도의를 저버리거나, 역할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어쨌든 그 자리에는 적절치 않음을 내포하고 있다. 이 표현이 어울린다면 그 자는 조직의 안팎에서 권위와 존재감이 실추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직위는 어떤 경우에도 가볍게 여겨져서는 아니 된다. 그 자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권한을 위임해 준 공동체의 위상과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게 '감투'로 불리면 그곳 식구들의 체면도 함께 손상된다. 실제의 감투는 말총이나 가죽, 헝겊 따위로 만들어져서 그 무게가 달걀 한 개보다 가볍다. 그러나 그 위치가 필요로 하는 역량과 그 사회가 요구하는 책무의 무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제 보니 감투를 쓴 자가 목에 힘주는 것을 이해해야 하겠다. 그 무게를 버티느라 그러고 있을 테니, 이는 흉볼 일이 아니겠다. 고개를 마음껏 들려면 버거운 자리는 사양하는 게 현명한 처신이겠다. 아니면 감투를 쓰고도 그 부담을 무시하면 되겠다. 하지만 그 대신 목덜미로 쏠리는 평범한 뭇사람들의 매서운 경멸의 눈초리는 감내해야 할 것이다.

열린마당

제주 요일별 배출제, 수거 체계부터 설계해야



주 종 현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밤, 원룸 현관에는 며칠째 페트병 봉지가 쌓여 있다. 배출 요일을 놓쳤기 때문이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는 2017년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다. 요일을 놓치면 다음 배출일까지 집에 보관해야 하고, 여름철에는 위생 문제로 이어진다. 배출 시간도 오후 3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다.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청년과 1인 가구에 부담이다.

제주도는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해 내년 중 폐지 또는 보완을 결정하기로 했다. 클린하우스는 1613곳, 제한 없는 재활용도움센터는 201곳이다. 제주시는 수거 인력 356명으로 상시 배출 시 인력·차량 증원이 필요하고 재활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환 여부와 별개로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대학가·원룸 밀집 지역에 재활용도움센터를 우선 늘려야 한다. 둘째, 시범운영은 주민 만족도뿐 아니라 배출량과 수거 인력, 재활용품 분리 상태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 셋째, 대학과 학생회는 신학기 전에 자취생·기숙사생에게 분리배출을 안내해야 한다.

편의와 재활용 품질은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다. 불편은 줄이면서 분리배출 습관은 지키는 체계가 필요하다. 작은 불편을 줄이는 일이 큰 환경 정책의 출발점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제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제 협력 요청

간담회서 제도개선 협력 당부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3일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을 만나 '4·3 특별법'과 '제주특별법' 개정 등 제주의 주요 입법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

위 지사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고령화로 권리구제가 시급한 만큼 역사왜곡 처벌 근거 마련과 유족회 법적 지위 확보 등을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고 20MW 이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권 이양, 중복 지정 개발 부지 매각,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등과 관련해 '제주특별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

위 지사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삶의 불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섬이라는 제주의 특수성을 조사·연구해, 국회의 정책과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 오소범기자

"클린하우스 1303곳 일제점검"

○…제주시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을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역 내 클린하우스 130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과 환경정비를 추진할 계획.

특히 상습적으로 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하는 클린하우스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

김진숙 생활환경과장은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클린하우스 이용에 불편을 주는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부터 신속하게 정비하겠다"며 "읍면동과 협력해 현장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 백금탁기자

사설

감귤 생산량 증가로 제값받기 선제 대응을

올해산 노지감귤이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이한 가운데 생산량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출하 조절과 품질관리 등 가격안정 대책이 요구된다.

올해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은 44만3300t으로 지난해 41만965t보다 7.8%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출하량은 2만7037t으로 생산 예상량의 6.1% 수준이다. 하지만 노지감귤 평균 누계가격은 5kg당 9778원으로 전년 1만297원보다 5% 낮다. 농산물수급관리센터는 사과와 배 등 과일 시장 전반의 침체와 맞물려 노지감귤 가격이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최근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갖고 품질관리 강화와 출하조절, 소비촉진 확대 등 수급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잉공급과 저품질 감귤 유통이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엄격한 품질 선별을 통해 고품질 감귤을 출하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최근 잦은 비로 인한 품질 편차가 소비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선과 과정에서 저품질 감귤을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감귤 조수입은 1조3071억원으로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런데 올해는 감귤 생산량 증가로 과잉공급에 따른 가격 하락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잦은 비로 인한 부패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격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철저한 선별로 고품질의 감귤 출하와 출하시기를 조절한 분산 출하가 이뤄져야 한다. 농정당국과 유관기관의 대도시 대상 소비촉진 홍보전도 전개돼야 한다.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행정 지연 없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정책의 시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관리계획 정비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인 내년 1월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이다. 획일적인 건축물 높이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책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기존 고도지구를 대폭 해제하고 '기준높이-최고높이'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도지구 해제 대상 면적은 제주시 92.5%, 서귀포시 92.8%에 이른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주거지역은 최고 75m(25층), 준주거지역은 90m(30층), 상업지역은 160m(40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행정절차가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양 행정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지만 두 차례 도의회 회기에도 안건을 제출하지 못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에 제출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 심의와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당초 시행 목표를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는 도시경관과 한라산 조망권, 비행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이다.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정책 시행이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더 이상 핑계를 대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현실적인 시행 일정을 조속히 제시해 도민과 건축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말씀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성안교회 제동성 장로님**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어 인사를 드립니다.

주후 2026년 11월 4일

배우자 이봉희
아 들 제치영
아 들 제요한
딸 제수연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성안교회
당 회 장 류정길 목사
장례위원장 부창보 장로

제주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주토박이
제주산담미등기토지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대행
벌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억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봉호
010-5254-6661
『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
하나장의사
616-08-85402